

대한상공회의소 報道資料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 기상도’ 조사
弘報室 ☎316-3602/5	이 자료는 2월 7일(月) 朝刊부터
* : (316-3451), (316-3454)	

-
- ,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업종은 생산비용 상승 등 타격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 건설업종은 신규시장이 기대되는 등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주요 기업과 업종별 의견을 종합해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주요 산업 기상도’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명암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건설 업종의 경우 단기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확대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발전, 항공 등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 기계, 조선, 식품 등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업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연비향상, 환경친화적 청정엔진 개발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미래형자동차는 자동차업종을 대기 오염이라는 반환경적 이미지에서 친환경적 이미지로 바꿔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2년 미래형자동차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액은 74조원, 수출 365억 달러, 고용창출 2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업계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건설업종은 교토의정서 발효로 다른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물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한편 에너지절약형 건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공공기관이 건물을 신축할 때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장이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형 건물에 대한 정부 지원과 시장 창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업종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통해 2008년 이후에는 '97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협회에서 이미 2010

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과불화탄소(PFCs)]의 배출을 '97년 기준 10% 줄이기로 세계반도체협회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철강,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에너지 저감비용의 상승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시멘트업종의 경우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북경올림픽(2008) 이후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시장으로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지업종은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다소비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산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다. 발전업종 중 화력발전의 경우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절대배출량 증가 및 비용 상승 등으로, 항공업종은 운항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증가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종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온실가스를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전자, 기계, 식품업종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주요 업종별 기상도]

구 분	단기전망(2005~2007년)	중장기전망(2008년 이후)
반 도 체	☹	□□
전 자	—	—
철 강	☹	☹
시 멘 트	☹	☹
정 유	☹	☹
석유화학	☹	☹
자 동 차	—	□□
제 지	□□	☹
발전(화력)	—	☹
항 공	☹	☹
기 계	—	—
조 선	—	—
식 품	—	—
건 설	☹	□□

* 기상도 : ※좋음, □□다소 좋음, — 영향 미약, ☹다소 나쁨, ☹나쁨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반도체, 자동차업종은 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온실가스와 관련한 수출장벽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업종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 (Kyoto Protocol)

3 ('97,) 가
, 가 1 (2008~2012)
'90 5.2% . '90
6%, EU 8%, 7% . 11 2 16
가 , 2001 .

2. (Kyoto Mechanism)

가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Joint Implementation), (Emission Trading)
, .
- (CDM): 가
.
- (JI): 가
가가 가 가 가
- (ET): 가 가
.